

日本の 對韓半島政策

1992. 12.

全東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와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한국의 안보 및 통일환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국제적인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시기에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에서는 전후 냉전시대에 일본이 시도해 온 대한반도정책을 분석·검토하고, 아울러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12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第I章 序 論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초 및 목표를 분석·검토하고 냉전이후시대 일본의 대한반도 적극 진출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II章 冷戰時代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1. 戰後 冷戰時期(1945~1969)

일본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중요시하여 왔다. 일본은 한

반도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식과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② 일본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미·중·러 등 타 강대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며 ③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동북아의 국제질서 그리고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하여 한·일 관계정상화를 중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으며(1965. 6. 22), 한·일국교수립 이후 정치·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국일변도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였다.

2. 닉슨독트린 以後 데탕트時期(1969~1979)

1969년 미국이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에서의 역할 축소 정책을 공식화하자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대외정책에서 독자적인 영역확대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닉슨독트린 이후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모순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일본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주둔 미군이 감축됨에 따라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韓國

의 안정을 위하여 對韓 經濟支援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일본은 미·중화해로 인한 동북아의 데탕트분위기하에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및 정치·경제적 이익확대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과 정치·경제적 차원의 對韓國 優先政策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지역 데탕트 분위기하에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는 조짐을 보이자 북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시도하였다. 일본은 남북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남북한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베트남 패망과 주한미군감축으로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자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추한미군감축을 반대하고 한국과의 안보유대 필요성을 재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대북한접근도 자제하였다.

3. 新冷戰時期(1980年代)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대서방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에 더 많은 안보역할을 분담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일본정부는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대폭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및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원조대상국으로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40억 달러의 「安保經協」을 제공하였다.

일본은 동맹국과의 안보유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부응하여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유대를 강화하였으며, 南北韓等距離外交를 잠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1981년 「外交青書」에서 북한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계속 증대해 나갈 뜻을 밝혔고, 북한의 대한국 테러행위에 따른 對北韓 制裁措置를 해제함으로써 국제정세 및 한반도상황이 호전되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다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第三章 冷戰以後時代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1. 東北亞 및 韓半島情勢 變化

냉전이후시대 세계 및 동북아정세는 냉전시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양극체제로 대표되는 냉전구조가 붕괴되었고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

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냉전이후시대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은 미국의 지원하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르바초프등장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북방정책의 성공은 한반도에 대한 러·중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중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북한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敵對姿勢를 취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對日접근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북한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2.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積極化

일본은 동북아질서의 변화,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북한수교협상은 남북상호핵사찰문제와 전후시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다. 核문

제와 관련, 일본은 과거 핵피폭 경험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자국의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교섭시 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하여 일·북한협상에서 북한이 남북 상호핵사찰을 수락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상문제와 관련, 나카히라 일본측 협상대표는 일본정부가 북한의 전후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식민지배기간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핵문제와 보상문제가 일·북한 수교협상의 중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일본이 일·북한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되면 수교협상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정세와 미·일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對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自主的이고 獨自的인 南北韓等距離外交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전략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냉

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추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냉전이후시대 자국의 안보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일안보체제 유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은 여전히 상당기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일본은 대북한 접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한국에 갖고 있는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측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념과 미·일간 역할분담 증대를 명분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第Ⅳ章 韓半島 통일문제에 대한 日本의 立場

1. 韓半島 統一에 對한 日本內의 論議

일본사회에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병존하고 있다. 否定的인 視角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첫째,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통일 후 한국과의 무역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일된 한국보다 분단된 남북한의 상태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일본인들은 세계조류에 비추어 공산화통일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질 한반도통일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반도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 및 일본의 공식적인 한반도통일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개의 분단된 국가를 상대하는 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 즉 남북한이 분단된 평화공존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급격한 통일과정 및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對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전개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현상유지 및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역사의 불가피한 대세로 굳어질 경우, 통일협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시기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안보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多角的인 努力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2. 統一問題에 對한 日本의 立場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핵피폭경험 때문에 그리고 자국 안보유지를 위하여 주변국 특히 남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통일한국이 핵무기제조 의도를 갖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남북한상호사찰로 한반도가 非核地帶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군축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양측이 상호합의와 국제안전보장의 틀 속에서 핵 및 생화학 병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하고 총병력을 감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과 미·일·중 소간의 「2+4」회담 등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구성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가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평화보장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협상 진전상황과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로서 「2+4」 구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구도를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노력 등 유엔중시 정책을 통해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장차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이 강화되어 남북한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협의가 실현 될 경우 일본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통일 移行期에 북한 김일성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을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통일한국이 탄생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주둔하여 지역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다섯째, 經濟·社會的 交流·協力問題와 관련, 일본은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진전될 경우, 일·북한 수교협상도 더욱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고, 일본의 대북한 진출 기회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第V章 結論：韓國의 對應

일본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南北韓等距離 外交政策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남북한등거리정책 추구로 인한 독자적인 대북한접근을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일·

북한 수교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대북접근이 한국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일·북한 수교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5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한·미·일간 정책협의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일·북한수교 이후 한국은 정치·안보 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교 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 지원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의 및 한·미·일 협조 체제를 통해 일본의 원조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본의 독자적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연방과의 협의채널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일본의 독자적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고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간 안보협의체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과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 기술협력의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冷戰時代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3
1. 戰後 冷戰時期(1945~1969)	3
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基調	3
나. 韓·美, 美·日 安保協調關係 構築	4
다. 韓國 一邊倒政策	6
2. 닉슨독트린 以後 데탕트時期(1969~1979)	8
가. 닉슨독트린과 日本의 役割增大	8
나.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試圖	9
다.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問題點	11
3. 新冷戰時期(1980年代)	14
가. 韓·美·日 安保紐帶 強化	14
나.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自制	16
4. 綜合 評價	18
第Ⅲ章 冷戰以後時代의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20
1. 東北亞 및 韓半島情勢變化	20
가. 東北亞 新秩序 構築과 日本의 役割增大	20

나. 南北韓의 對外政策 變化	21
(1) 韓國의 北方政策	21
(2) 北韓의 對日接近	23
2.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積極化	26
가. 自民·社會黨 代表團 訪北	26
나. 日·北韓 修交交涉 現況	29
3.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33
第IV章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日本의 立場	36
1. 韓半島 統一에 對한 日本內의 論議	36
가. 韓半島 統一에 對한 憂慮論	36
나. 韓半島 統一에 對한 支持 혹은 受容論	38
다. 評價	40
2. 統一問題에 對한 日本의 立場	41
가. 政治 軍事問題	41
나. 經濟·社會的 交流·協力問題	44
第V章 結論: 韓國의 對應	46
參考文獻	49

第I章 序 論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대륙세력의 일본침략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상황 속에서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 통일환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조 및 목표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이 취할 정책 및 입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및 미·일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제Ⅱ장에서 냉전시대를 전후 냉전시기, 닉슨독트린 이후 데탕트시기 및 1980년대 신냉전시기로 나누어 미·일관계 변화 및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을 분석하였고, 제Ⅲ장

에서 냉전이후시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변화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제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冷戰時代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1. 戰後 冷戰時期(1945~1969)

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基調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큐슈(九州)와 불과 200k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세력의 일본침략을 막기 위한 緩衝地帶로서 존재해 왔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일본은 자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일본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한반도가 미·중·러 등 타 강대국의 압도적인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최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¹⁾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반도정책의 주안점을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및 한반도 현존정권(남·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두었다.

1)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p. 33.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미·일관계 및 한·일관계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미·일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국을 의식하면서 자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나. 韓·美, 美·日 安保協調關係 構築

냉전시기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범주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서방진영의 지도국으로서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다.²⁾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일본경제부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전후 일본은 신중상주의적 요시다(吉田 茂)노선에 따라 안보문제를 미국에 위임하고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더욱 가속적으로 전환되었고,³⁾ 한·미·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비공식적

2) 石井修, 「冷戦と美日關係」(東京: ジャパン タイムズ, 1989), pp. 38~53;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4), pp. 173~87.

3) 한국전쟁은 미국의 대일강화협상을 촉진시켰다.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일협상을 급진전시켜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켰다. 또한 미국은 과거 전범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해제하여 쓰가모 형무소에 감금되었던 이시바시(石橋, 1951년 6월 20일 석방), 하또야마(鳩山, 1951년 8월 6일), 기시(岸, 1952년 4월 28일) 등을 석방시켜 주었으며, 이후 이들은 차례로 수상으로 등용되었다. 岩永健吉, 「戦後日本の政黨と外

인 군사적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 우선 한국전쟁으로 주일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일본은 미군정하에서 일본의 치안을 위해 경찰예비대를 발족시켰다.⁴⁾ 또한 일본은 한국전쟁기간중 일본열도가 미국의 후방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하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⁵⁾ 이에 따라 한·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었다.

한편 한·일간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합의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여기서 「극동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극동유사시의 지리적 및 전략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일

交」(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85), pp. 11~28; 桶渡由美, 「戰後政治と日・米關係」(東京:東京大學出版部, 1990), pp. 51~67.

- 4) 주일미군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의 대내치안문제가 제기되었는 바, 맥아더는 요시다에게 서한을 보내 75000명이나 되는 국가경찰예비대를 조직할 것을 명하였다.
- 5)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일본 국내 정치면에서 보수연합의 배경이 되었다. 岩永健吉, 「戰後日本の政黨と外交」, pp. 31~36.
- 6) 극동조항과 관련하여 미·일간에는 사전협의 문제에 관한 추가협정이 있다. 1960년 6월 23일자 기시(岸)와 하터(Harter) 미국무장관과의 사이에 교환된 “미일안보조약 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극동조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의 안보문제를 상호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방위청은 한국전쟁의 재발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자위대의 對美 작전협력계획을 수립하였다.⁷⁾

1960년대들어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본격 개입하였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한·일관계정상화를 강력히 중재하였다.⁸⁾

다. 韓國 一邊倒政策

1950년대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범주내에서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한·일회담시 쿠보다(久保田)발언, 일본정부에 의한 채일교포의 복송 및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정책 등으로 한·일간 공식외교관계 수립이 불가능 하였다.⁹⁾

1960년대에 미국은 동북아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일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정상화를 설득하였는바, 일본정부는 전후처리와 경제성장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한·일국교수립(1965. 6.

7) 구체적인 미·일협동작전계획의 실례로 三矢作戰計劃(정식명은 昭和 38年度 統合防衛圖上研究, 63년), 飛龍(Flying Dragon)作戰計劃(65년, 정식명은 昭和 40年度 協同作戰計劃)과 부르란 작전계획(66), 金龍(Golden Dragon)作戰計劃(7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三矢計劃은 한반도 유사시 미·일합동작전에 대하여 연구한 극비문서로서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가상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계획문서로 평가된다.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東京: 社會評論社, 1985), pp. 49~62; 이상구, “한미일 군사제후관계의 전개과정,” 「국제정치논총」, 제10집 1970, pp. 73~74.

8) 김옥렬, 「韓國과 美·日關係論」(서울: 一潮閣, 1973), pp. 67~80.

9) 김옥렬, 「韓國과 美·日關係論」, pp. 23~49.

22)으로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전후처리를 매듭지어 한국으로부터 안보적 위협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일간 경제협력 증대로 한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¹⁰⁾

일본은 한·일 국교수립 이후 정치·안보·경제적인 면에서 한국과의 유대를 견지하는 한국일변도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북한 공식관계는 냉전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개선되지 못했지만 일·북한간 민간교류는 1954년 시작되어 1955년 하토야마(鳩山)정권 이후 활기를 띠었다.¹¹⁾ 그러나 일본이 북한과 민간교류를 인정한 것은 좌익의 요구를 무마시키고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북한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류의 수준과 범위는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제한된 것이었다.¹²⁾ 특히 1965년 한·일간 국교가 수립되자

10)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자신의 안보를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일본의 협력하에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에 있어서 대외경제관계의 중점은 점차 미국주도로부터 일본주도로 전환되었다.

11) 일본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남일 북한 외교부장의 대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 제안을 남북한 쌍방승인 불가원칙에 따라 거부하였지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인 일본의 사회당 및 일부 진보단체들의 노력과 북한의 적극적인 인민외교에 힘입어 일·북한 정당 및 민간교류는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의 조선 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의 일·소무역회 사이에 민간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북한과 간접무역이 진행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이케다(池田)내각의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공산권과의 교역확대와 동시에 북한과의 직접무역을 허용하여 1963년 양국간 무역총액은 1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Tamak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 (Winter 1991), pp. 70~72.

12) 石井修, 「冷戦と美日關係」, pp. 98~122.

북한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¹³⁾, 일본도 한국일본도정책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2. 닉슨독트린 以後 데탕트時期(1969~1979)

가. 닉슨독트린과 日本의 役割增大

1969년의 닉슨독트린은 중국 및 일본을 이용하여 소련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선언이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을 통해 동맹국들에 대한 핵억지력과 군사지원은 계속하지만 병력 제공은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인도양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일본에게 소련 태평양함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요청하였다.¹⁴⁾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역할감축을 공식화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은 한반도

13) 북한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으로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東京: PHP研究所, 1991), pp. 93~101.

14)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일본은 專守防衛原則을 고수하면서도 미국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을 추진하였고, 남해 연안 및 류큐섬 등 남해도서의 전략거점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추진하였다. 永井陽之助, 「多極世界の構造」(東京: 中央公論社, 1973), pp. 271~304; 민족통일연구원 편, 「소련의 동북아정책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191~98.

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욱이 미·중 화해로 동북아에 데탕트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나.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試圖

닉슨독트린 이후 일본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상반된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주둔 미군이 감축됨에 따라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韓國의 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했다. 둘째, 미·중화해를 계기로 데탕트분위기가 확산되자 일본은 한반도에서 안보 및 정치·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감축함에 따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對韓 經濟協力을 확대하였다.¹⁵⁾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차원의 對韓國 優先政策 基調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71년 미·중화해로 동북아지역에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자 대북

15) 일본정부는 동북아 데탕트시기인 1971년부터 「청구권협정」에 의한 준비 상과는 별도로 「한국의 안정」을 위한 對韓國 新規 無償協力과 엔차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對한국 경제협력은 제1차적으로는 미국의 대일책임분담요구에 응하는 대미안보협력의 일환이었다. 李元炯, “日·韓外交交渉過程の分析”(慶應義塾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9), pp. 58~64, 95~100.

한 접근정책을 취하는 등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대북한 접근정책을 통하여 전후처리가 끝나지 않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자국의 안보위협을 제거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¹⁶⁾ 반면 일본은 북한과의 접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¹⁷⁾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1971년 9월에 개최된 미·일각료회담에서 “1969년 「사토 닉슨 공동선언」의 「한국조항」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사태에 개입될 것과 중·소·북한을 자극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냉전구조하에서 기초된 「한국조항」을 데탕트구조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1975년 「포드 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의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긴

16) 일본정부는 1970년대 초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남북한 兩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특히 자민당의 일부인사와 일본사회당이 북·일간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성을 보였는 바, 1971년 11월 자민당의 구노슈찌(久野忠治)의원을 포함 240명의 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이 발족되었다. 또한 1972년 남북「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으로 할슈타인원칙이 포기되자 다나카 내각은 북한과의 인적교류를 경제·기술교류차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전환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對북한 무역은 1974년 수출 2억 5천만 달러, 수입 1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이 자유주의국가중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일·북한 경제관계는 북한의 외채체불로 위축되었다.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pp. 361~72.

17) 일본은 1972년 제6회 한·일정기각료회담 공동성명에서 이전의 회담과는 달리 한국의 안전에 대한 「북의 위협」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1974년 8월 29일 기무라(木村) 외상의 참의원 외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려고 하였다.

요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新한국조항」으로 대체되었다.¹⁸⁾

또한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와의 협의하에 공식적으로 「두개의 한국」정책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는 바, 1977년 3월 22일 「후쿠다-카터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내지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유지가 계속 중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라는 「한반도조항」이 채택되었다. 이 「한반도조항」은 미·일양국정부가 동북아의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결국 일본은 남북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남북한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¹⁹⁾

다.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問題點

일본은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되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해지자 자국의 단기적인 안보 및 경제적 이익(한국과의 유대관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일본의 남북한등거리외교는 첫째, 미·일안보조약상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틀

18) 이러한 「신한국조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데탕트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국의 안전」-「한반도의 안전」-「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3단계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한반도분쟁과 연동되어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자동적 가동 절차에 일정한 제동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19)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집 2호 (1992년 겨울), pp. 377~78.

을 벗어나지 못했고, 둘째, 한반도의 냉전구조 속에서 한국과의 정치·안보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대화 중단, 북한에 의한 해상도발 및 비무장지대 땅굴사건, 1975년 봄 베트남 공산화 이후 김일성의 호전적인 대남강경발언 등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나타내 주는 사건들이 속출하였다. 또한 한·일관계도 문세광사건 및 기무라발언 등으로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되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⁰⁾

일본은 1975년 4월 미야자와(宮澤) 외상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한국조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국의 對韓防衛公約 遵守를 요청하였으며, 이어 8월에는 미끼 수상이 미국을 방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였다.²¹⁾

또한 일본정부는 카터행정부 등장(1977. 1. 20) 이후 한·미 양국정부간에 부각된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관계 악화로²²⁾ 인

20) 일본은 1975년 8월 한·일의원연맹 설립 및 조총련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통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70년대초반 잠시 활발했던 일·북한 교역도 북한이 80억 엔에 달하는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pp. 379~80.

21) 이에 따라 포드대통령은 12월 미국이 인도차이나정세의 급변 후에도 아시아 태평양국가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안보공약을 준수한다는 「신태평양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포드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공약을 금후에도 준수할 것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고려에 있어서 한국을 우선하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다.

22) 한·미관계는 카터정부가 「한국의 안전」과 동시에 「한국민주화」를 중요시함으로써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카터대통령은 1982년까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를 완

해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등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재강조하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승인함으로써(1978. 11. 28) 극동유사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시설 및 기지에 대한 「사전협의」 및 「편의제공」방식에 합의하였다(제3항 극동유사시 미·일간의 협력).

요컨대 일본은 데탕트시기 초반에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共存 및 現狀維持를 위한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추진하였지만, 베트남 패망 및 한반도긴장 고조,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자 대북한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재확인하였다. 일본은 동북아의 데탕트 潮流에도 불구하고 미·일방위조약에 따른 한국과의 공동의 안보의식 및 안보유대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²³⁾

료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을 비적성국가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미국시민의 북한여행금지 해제 및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와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표명하여 대북 접근 자세를 취하였다. 또한 소위 코리아게이트사건과 한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 등으로 한·미 양국간에는 전례없는 대립과 불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국관계 악화는 1979년 여름 카터의 방한(6월 29일~7월 1일)과 주한미군철수 중지 발표때까지 계속되었다.

- 23) 일본의 항공방위는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고 한·일양국의 조기경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사들이 같은 암호(codes)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일양국은 군사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미국을 한편으로 하고 일본해군을 다른 한편으로하여 소련잠수함 이동을 탐지하는 은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79년 7월 25일 야마시타(山下元利) 방위청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긴밀한 군사교류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및 한국군현대화를 위한 한국의 군수산업 육성책에 일본기업이 합작회사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Reinhard Drifte,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J. W. M. Chapman, R. Drifte and I. T. M. Gow, *Japan's Quest for Comprehensive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106~16.

3. 新冷戰時期(1980年代)

가. 韓·美·日 安保紐帶 強化

소련은 1970년대 형성된 미·일·중 3국간 전략협조관계 구축에 대응하여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²⁴⁾ 이와같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제7함대 및 태평양전지역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소련은 1978년 여름 이후 일본과 영유권 분쟁상태에 있는 에토로후(擇捉)와 쿠나시리(國後)를 군사기지로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²⁵⁾

한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1980년대 신냉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은 서방세계에게는 소련 팽창주의의 실증적 증거로서 인식

24) 우선 동북아 지역에서는 1969년~1979년 사이에 소련지상군이 20개 사단 증가하였고, 장비도 탱크 T-62, 장갑차 BMP-1 미사일 SA-7 등으로 현대화되었다. 해군력과 공군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련은 핵잠수함 수를 대폭 증강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 MINSK를 배치하였다. 공군도 MIG-23와 MIG-25와 같은 항공기로 현대화되었으며 SS-20 미사일과 BACKFIRE폭격기를 배치하였다. 한편, 동남아 지역에서 소련은 1978년 6월 베트남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경제·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베트남의 캄란만을 해군기지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Sidney Bearman, "Pouvoir et politique soviétique dans le tiers-monde: l'Asie orientale," in Christoph Bertram, éd., *La Menace soviétique* (Nancy: Biblioth que Berger-Levrault, 1981), pp. 194~98.

25) 일본은 이 섬이 일본 본토에서 17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블라디보스톡 및 페트로파블로스크 소련기지에서부터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소련 해상수송로 상에 위치하므로 소련의 조치가 일본방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였다. Andrew Marshall, "Les sources de la puissance soviétique: la puissance militaire dans les années 80," in *La Menace soviétique*, p. 125.

되었으며 서방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²⁶⁾

이에 따라 미국도 해외 군사·안보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맹정책을 취하였는 바, 일본 및 한국에 대하여 소련 군사력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역할분담 및 협력을 요청하였다.²⁷⁾ 이로써 한·미·일 3국간 안보유대가 강화되었으며, 한·미(1981. 1), 미·일(1981. 5 및 1983. 11),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1983. 1 및 1984. 9)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군, 일본자위대, 주일·주한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급속히 증강되었으며, 일본은 소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1907년 「영·러협상」의 명백한 위반이며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영향권 분할을 규정한 1943년 「알타협정」의 위반이었다. 소련 영향권 범위 밖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소련의 침략은 극동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둘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서방국가들에게는 중동 유전지대 특히 이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일본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이 자신의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석유생산 지역 및 석유수송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인도양 접근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인도양은 1960년대 말 이후 영국의 뒤를 이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자신의 작전구역으로 연장하여 간주해 오던 지역이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으로부터 유래한 ‘스윙 전략(Swing Strategy)’에 따라 태평양과 페르시아 만을 연결하는 인도양을 장악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하였다. 田久保忠衛, 「レーガン戦略の破局」(東京: 講談社, 1981), pp. 33~52.

27) 레이건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정부는 우호국의 국내정치보다도 안보체제를 우선하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에 부차적인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요지인 한국이 공업국가로서 성장함으로써 한국 자체가 미국의 국익상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 결과 신냉전 구조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격상되었다. 田久保忠衛, 「レーガン戦略と日本の破局」, pp. 52~59.

련의 위협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70년대 전수방위전략으로부터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다.²⁸⁾

나.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自制

신냉전시기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해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총합안전보장원칙」에 의거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주변국에서 안보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을 중요한 원조대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카소네수상의 공식 방한(1983년 1월 11일~12일)시 40억 달러의 安保經協資金을 제공하였다.²⁹⁾

28) 지역방위론은 1981년 종전의 200 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선언한 스즈키 수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나카소네수상은 1983년 1000해리 해상수송로의 범위를 괌~토쿄, 대만해협~오오사카로 명시하면서, 일본주변 3해협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해상에 대한 지역방위론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간의 방위력증강계획인 「56 中期業務計劃」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의 제1차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86~1990)에서는 해상방위력 강화를 위한 원양에서의 공격용 무기의 도입계획이 포함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소련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pp. 198~202.

29) 한편 나카소네 수상은 방한시 한·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방위력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일본수상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군사력증강에 대하여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권 5호 (1990년 5월), pp. 60~65.

이와 같이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新냉전 추세에 따라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유대를 강화하였다.³⁰⁾ 그러나 일본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신냉전시대 일본은 동맹국과의 안보유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부응하여 對북한 접근정책 보다 한국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81년 「外交靑書」에서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서서히 증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힘으로써 국제 및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다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³¹⁾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테러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참여하였지만,³²⁾ 제재조치 시행 후 1년여 후에 이를 해제함으로써(1985년 1월 및 1989년 1월 해제) 북한과 관계개선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냉전시기 일본은 동맹국의 안보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에 따라 안보 및

30) 일·북한 경제관계는 북한의 외채 滯拂(800억엔 상당)로 일본정부가 1986년 북한에 대한 무역 보험프로그램을 중지함에 따라 더욱 위축되었다. Katsumi Sato,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in Masao Okonoki, ed., *North Korea at Crossroads* (Tokyo: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pp. 138~43.

31) 日本外務省, 「外交靑書: おかの外交の近況」, 第24號 (昭和 56年版), p. 18.

32) 山本剛士, “日朝不正常關係史,” 「世界」, 臨時增刊, 1992年 4月, pp. 171~96.

정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장기적인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국제 상황이 호전될 때를 대비하는 대한반도정책을 취하였다.

4. 綜合 評價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각 시기 별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적응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한등거리외교를 계속 모색하였다.

우선 전후냉전시기 미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한·미 및 미·일간에 안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을 위하여 한·일간 관계정상화를 중재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국일본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중·장기적인 정치·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반도 전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³³⁾ 일본은 닉슨독트린 이후

33) 이러한 일본의 인식은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동북아의 데탕트분위기 및 남북한간의 화해분위기하에서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한편으로는 미국의 역할증대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적 유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모색하였다.

신냉전시기 일본은 미국의 동맹정책에 따라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 압력을 받았고,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당분간 자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外交靑書」(1981년판)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대북한 제재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결론적으로 일본은 데탕트시기 이후 대북한 관계개선을 통해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미국의 개입을 감축하려고 한 데탕트시기에 자국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한등거리외교를 모색하였다.

195(Ⅲ)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 부임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한·일간의 해석차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第三章 冷戰以後時代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1. 東北亞 및 韓半島情勢變化

가. 東北亞 新秩序 構築과 日本의 役割增大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는 냉전시기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개혁 및 개방, 동구공산체제의 와해 등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미·소양극체제하의 냉전구조가 붕괴되었다. 소련은 미국과 전략무기감축협상에 합의하였으며,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미국과 전략핵 대폭감축과 공동방위시스템 개발에 합의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내 정치·경제체제를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서방 경제권으로의 편입노력으로 세계적 차원 및 동북아 지역에서는 화해 및 긴장완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둘째,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지역 질서도 변화를 맞고 있다. 과거 냉전구조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3각체제와 북한, 소련, 중국의 북방 3각체제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나 북방 3각체제가 와해됨으로써 미·일·중·러 4강이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상호 견제하는 4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약화로 인하여 전진배치 축소 등 전략구조의

재조정을 기도하고 있으며, 지역안정을 위하여 동맹국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을 국제질서 안정유지 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안보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정세 변화에 따라 경제적 초강대국 일본은 미국의 지원하에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에서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일본은 냉전이후시대에도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을 통과시키고(1992. 6. 15)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함(1992. 10. 14)으로써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한 정치·안보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역할증대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南北韓의 對外政策 變化

(1) 韓國의 北方政策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국제적인 화해분위기 확산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방정책은 한국과 이념 및 체제가 다르지만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련, 중국 및 동구권 제국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도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북방정책은 한국이 북방 사회주의 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고 아울러 북한의 對미·일 관계개선에 협조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유도하여 남북한간에 화해 및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북방정책 추진결과 한국은 1989년 2월 1일 헝가리 정부와 정식 외교관계를 필두로 동구권의 폴란드(1989. 11. 1), 유고(1989. 12. 27), 체코슬로바키아(1990. 3. 22), 불가리아(1990. 3. 23), 루마니아(1990. 3. 30), 알바니아(1991. 8. 22) 등 동구권의 모든 국가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들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한편 소련과는 1989년 4월 무역사무소를 교환 설치한 이래 1990년 2월 수교의 전단계인 한·소 영사처를 설치하고 같은 해 9월 30일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과도 1990년 10월 20일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991년 1월 30일 북경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92년 8월 24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한국의 북방정책은 러·중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역에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중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북수교 원칙을 천명하고 대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北韓의 對日接近

북한의 대외정책목표는 순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³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의 일환으로서 중·소와의 同盟關係를 維持하고, 反帝反美鬭爭政策 및 對韓지원세력 약화를 위한 한·미·일 3角同盟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북한은 미국을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인류공동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미제국주의와 종속적 동맹관계에 얽혀 있는 위험한 침략세력” 혹은 “미제의 아시아 전략에 편승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군국

34)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 제5기 1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0), pp. 483, 499. 이러한 북한의 대외목표 및 정책은 공산체제 유지라는 대내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반미 및 반남한정책에 동원하는 데에 이용하여 왔으며 국내적으로 통제와 동원정책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Byung Chul Koh, “Is North Korea Changing Its Southward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2 (Summer 1991), pp. 60~61; Rinn-Sup Shinn,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Pas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onsored by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Korea, May 31~June 2, 1992, p. 3.

주의 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에 대해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군사대국화의 길로 떠밀어 침략적인 아세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준수 및 핵우산보호를 통해 미·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對日 敵對姿勢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경제 및 안보적 필요에 의해 대일접근을 모색하여 왔으며,³⁶⁾ 최근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북한은 1990

35) 윤우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군사궐력강화책동,” 「로동신문」, 1992. 10. 30; 황진석, “평화적 이행전략은 제국주의 위기의 산물이다,” 「로동신문」, 1990. 7. 27. 특히 북한은 1992년 6월 7일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참의원 특별위원회 가결과 관련, “이 법안의 통과로 제2차세계대전 후 억제되어 왔던 자위대 무력의 해외파견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초가 이루어지고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해외팽창으로 줄달음 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리석윤, “굴레벗은 군국주의,” 「로동신문」, 1992. 6. 10.

36) 북한이 對日접근을 모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對日접근을 통해 한·미·일간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弛緩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한국의 우방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남조선혁명」 및 「하나의 조선」 논리에 대한 국제적 지지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일본의 영향력있는 좌익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 및 방위력 강화를 억제하려고 한다. 넷째, 북한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한 선진 자본 및 기술의 도입통로 마련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비정치적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 및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對日接近을 시도하고 있다. Robert A. Scalapino,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pp. 334~41.

년 6월 4일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간 정상회담과 한·소 수교 결정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북한은 對日 수교를 통해 한·소 수교에 따른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려 하였다. 북한은 한·소정상회담 직후 일본과 일·북한간 수교교섭을 위한 비밀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停滯된 경제에 活力을 주기 위하여 외국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다. 북한경제는 매년 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⁷⁾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김일성은 김정일 후계체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일본과 주변국들의 북한체제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³⁸⁾

넷째, 자민당이 1990년 2월 중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함으로써 리쿠르트 스캔들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북한은 일본의 집권 自民黨과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한지도자들은 19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자 자민당이 사회당이 주도하는 연합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믿었었다.³⁹⁾

37) 북한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의 성장을 기록하여 2년사이에 10%에 가까운 경제후퇴를 나타냈다. 「内外通信」, 제824호, 1992. 12. 3;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p. 14~27.

38) 小牧輝夫, “北朝鮮ためにどこまで”變わて,” 「世界週報」, 1992년 5월 19일, pp. 22~23.

39) Hong Nack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90, no. 555 (April 1991), p. 165.

이상과 같은 냉전이후시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접근을 적극 추진하였다.

2. 南北韓 等距離外交: 對北韓 接近 積極化

가. 自民·社會黨 代表團 訪北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1988. 7. 7)과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전개로 對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제약 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일본은 1990년 9월 가네마루 前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여(1990.9.24~28) 일·북한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신냉전 시기 일본이 취했던 한국 위주의 대한반도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1970년대 초 데탕트시기 공식화되었던 남북한등거리외교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이 1990년 9월 自民·社會黨 대표단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일본은 한·소정상회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對蘇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둘째, 가네마루 전부총재가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각 별히 독자적 행동을 취하였으며, 당시 가이후 수상은 사회당과의 타협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네마루 전부총재의 이니셔티브

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일본외무성은 이러한 조치가 한반도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였다.⁴⁰⁾

가네마루 前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 공동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은 양국간 관계정상화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일본 후지산마루(富士山丸) 선원을 석방하기로 약속하는 등⁴¹⁾ 국교수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본측 대표들은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북한측 조치 및 제의에 부응하여 일본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해제, 양국간 위성통신 개방 등을 북한측에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식민지배기

40) 일본외무성이 정당외교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외무성이 가네마루의 동의를 있기 전부터 조심스럽게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수행해 왔던 점으로 미루어 일·북한접촉 및 관계개선 노력은 외무성의 협조 혹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네마루를 평양에 동반했던 아시아국 부국장 가와시마는 3월 파리에서 북한과 첫번째 비밀 접촉을 가졌고 7월 초에는 도쿄에서 두번째 유사한 회합을 가졌으며, 7월 말에는 교토에서 세번째 회의를 가졌다. 「조선일보」, 1990. 12. 5, p. 2.

41)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83년 10월 30일 북한의 남포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제18호 후지산마루(富士山丸) 선박에 북한군 병사 민홍구가 몰래 숨어 타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11월 15일 화물수송을 위해 다시 남포로 입항하였을 때, 북한은 이 배의 선장과 기관장을 억류하였다. 일본은 북경과 비엔나에서 북한외교관들과 선원 2명의 석방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북한은 민홍구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한 일본인 선원을 석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987년 1월 김만철 일행 망명사건 및 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나고 1987년 11월 일본정부가 민홍구를 가석방하자, 북한은 12월 24일 일본인 선원 2명에게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과 민홍구 납치를 이유로 15년간의 교화노동형의 판결을 내렸다. 山本剛土, “日朝不正常關係史,” pp. 175~77.

간 동안 북한에 입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양국간 정상화 이전에 완료할 것과 2차대전 이후 45년간 북한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승인한다고 약속하였다.⁴²⁾

이러한 일·북한 양측의 합의에 대하여 한국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미국도 북한의 核안전협정 조인 거부 및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들어 일본측의 태도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였다.⁴³⁾ 한국은 비록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을 통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일본의 二重協商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북한 정상화가 남북한의 대화진전 및 통일과정에否定的인 效果를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한국정부는 1990년 10월 초 자신의 방북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네마루를 통해서 일본이 대북수교협상에서 5개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외교채널과 1991년 1월 노·가이후 회담을 통해서도 이 원칙들을 재강조하였다.⁴⁴⁾

42) *Korea Herald*, September 29, 1990, p. 1.

43) 주일 미국대사 아마코스트는 일본관리들 및 가네마루와 일·북한 관계정상화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미국이 일본관리들에 대한 충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사찰문제였으며, 1990년 10월 30일 솔로몬(Richard Solomon) 미국무성 차관보는 “한반도 핵확산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小此木政夫, “朝鮮統一問題と日朝國交渉,” 「國際問題」, 1991年 3月, pp. 29~30.

44) 일·북한수교협상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협상에 대해서 남한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 둘째,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일본외무성은 북한과의 공식적인 협상관할권을 정당으로부터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외무성 본연의 신중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시켰다.⁴⁵⁾

나. 日·北韓 修交交渉 現況

일·북한 수교교섭은 1992년 11월 초까지 제8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일·북한 수교교섭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主要 議題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급진전되지 못하고 있다.⁴⁶⁾ 첫째가 북한의 핵의혹해소 문제이고, 둘째가 戰後시기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이 원조가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일본은 남북한대화 진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넷째, 일본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사찰 협정에 조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 다섯째, 일본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할 것 등이다.

- 45) 일·북한수교협상은 1991년 1월 말 제1차 평양분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세차례에 걸쳐(1990년 10~11월) 북경에서 일정 및 협상 주제에 대한 예비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의 예비협상 대표 다니노 사구타로(谷野作太郎)는 예비협상종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의 정당대표들이 발표한 1990년 9월 28일 공동성명이 구속력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讀賣新聞」, 1990. 12. 18.

한편 자민당과 일본사회당간의 관계는 1990~91년사이의 겨울에 걸프전에 대한 대응을 놓고 현격히 악화되었고 이것이 대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체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사회당은 타나베 부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중개역할을 시도하지만 일본사회당의 영향력은 대중의 지지 약화로 쇠퇴하고 있어서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가네마루의 미·북한간 관계개선 중재 노력도 미국의 거부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북한노동당 국제담당서기 김용순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여(1991. 2) 일본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

- 46) 각 회담별 쟁점 및 경과와 의제별 타결 현황에 대해서는 허문영, “북한의 대일·미 교섭 현황과 수교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1992년 6월), pp. 66~71; 김용호, 「북한과 일본의 수교회담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pp. 34~39.

核문제와 관련, 일본은 과거 핵피폭 경험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자국의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⁴⁷⁾ 더구나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교섭시 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⁴⁸⁾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북한 협상초기에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락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1년 미국의 해외배치 전술핵 철수 선언,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 선언 및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발표 등으로 핵사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 5월 IAEA에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년 6월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대북한 핵사찰시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은 제7차 일·북한수교회담(5월 13일~15일)에 이어 제8차 일·북한 수교회담(11월 5일~6일)에서도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다.⁴⁹⁾ 일본은 수교협상에서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간 상호핵사찰까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항이 이행되지 않

47)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p. 61~65.

48) 菊池正人, "オリフ"と核: 日朝交渉を見つめるアメリカの眼, 「現代 コリア」, 第308號 (1991年 1月), p. 27.

49) 「朝日新聞」, 1992. 11. 7.

는 한 일·북한 수교협상은 급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상문제와 관련 나카히라 일본측 협상대표는 일본정부가 북한의 戰後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점차 협상 논의의 초점을 이 戰後기간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식민지배기간의 補償方式問題로 이전시켰다.

이와 같이 핵문제와 보상문제가 일·북한 수교협상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협상 난관의 이면에는 幕後 調整者로서의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적인 압력수단을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일·북한간 관계개선이 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북한수교교섭 초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핵문제를 국교수립의 實質的 前提로 제시하였으며, 미야자와(宮澤)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정부의 입장은 더욱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對북한정책에 따라 일·북한간 수교협상에 진전이 없자 북한은 對日 관계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제반 이니셔티브를 취하였으나,⁵⁰⁾ 미국은 對北관계개선을 위한

50) 북한은 미국의 경직된 대북자세에도 불구하고 1991년 6월 중순 미군유해를 반환하였으며, 대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을 따라 잡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우려(1971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처럼)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91년 5월 21일 북·일 협상이 중단되었을 때 북한언론매체들은

5개 전제조건과 더불어 북한의 人權問題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의 해외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일본의 對北 접근을 억제하고 있다.⁵¹⁾

일·북한 수교협상이 북한의 核문제와 賠償문제 그리고 한국 및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북한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국정부가 제시한 5개원칙 중 몇 가지를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북한수교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북한간 수교협상을 남북대화 진전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일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일본이 일·북한간 수교협상을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일본은 비록 남북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일·북한 수교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⁵²⁾ 특히 최근 한·중 수교는 일·북한 수교협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은 남북한등거리외교에 입각하여 북한과 국교를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9년이래 북경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수차례 열린 참사관급 접촉 수준을 올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의 경쟁심을 자극하려 하였다. 「内外通信」, 1991. 5. 23.

51) 미국은 ①핵사찰문제해결 ②남북대화의 진전 ③테러리즘 포기선언 ④대미 중상선동중지 ⑤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유해반환문제해결 등 5개항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북한이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 한해서 고위급접촉을 포함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2) 1991년 1월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展望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변화 및 미·일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對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입각한 獨自的인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냉전시대의 대탕트시기에도 일본은 자주외교에 입각하여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시도한 바 있었으며, 냉전이후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은 한·중 수교에 따른 한·중·러의 대일본견제를 위한 3국협력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남북한등거리외교를 통해 한국의 對중·러 접근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첫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전략 변화에 따라 형성된 동북아질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은 향후 미국의 동북아정책 혹은 미·일관계의 질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원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이 독자

일본은 일·북한 수교교섭이 남북한대화를 재개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북한 수교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적인 군사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의 틀 속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군사적으로 공헌하기보다 경제적으로 공헌하기를 바라고 있다.⁵³⁾ 또한 일본도 냉전이후시대 자신의 안보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전히 미·일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대북한 접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기초한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한국의 반응을 고려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한 자신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며, 일본이 미국과 안보유대를 맺고 있는 한 한국과 공동의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⁵⁴⁾ 또한 일본은 자본, 기술 등 경제분야에서의 한·일간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한·미·일 각국의 이익 및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해 볼 때,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대한반도정책과 상반된 독자적인 대한반도정책을 당분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의 접근에 있어서도 한국 및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대북한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도 한국에 편향된 남북한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

53) Kishore Mabbubani, "Japan Adrift," *Foreign Policy*, Number 88 (Fall 1992), pp. 135~36.

54)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일본은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おか³ 外交の近況」, 第35號 (平成 3年版), p. 208.

55) Rob Steven, *Japan's New Imperi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0), pp. 146~67.

이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북한 보상 및 경제지원을 한·일관계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의 과도한 대북한 접근은 한국 및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미·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력을 배경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이념과 미·일간 역할 분담 증대를 명목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⁵⁶⁾

특히 일본은 냉전구조가 와해된 상황에서 자주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한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남북한 양측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56) 일본은 유엔중심주의를 강조하여 미·일안보의 틀속에서 합법적으로 자주성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즉 일본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위한 외교노력 등 유엔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일안보체제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 자주적 입장에서 국제문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第Ⅳ章 韓半島 統一問題에 對한 日本의 立場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반도통일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남북한사이에 화해와 평화공존을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통일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남북한관계의 安定化 혹은 남북한 平和共存體制 維持에 외교적 중점을 두고 있다.⁵⁷⁾ 또한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인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경우에도 통일과정이 완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⁵⁸⁾

1. 韓半島 統一에 對한 日本內의 論議

가. 韓半島 統一에 對한 憂慮論

일본사회에는 남북한통일에 대해서 否定的인 視角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불안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반도통일보다는 남북한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論據는 다음과 같다.

57)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 104.

58) Brian Bridges,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p. 190.

첫째, 통일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疑懼心이다.⁵⁹⁾ 특히 이들은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중·러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어도 한민족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핵을 보유한 강력한 한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한반도의 남북한은 일본을 혐오하고 있으며, 만일 한반도통일이 실현되면 反日感情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과 무역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본내 일부 언론 및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6,500만 인구를 갖게 될 통일한국은 근면한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방위비 감소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러시아나 중국이 투자를 바라고 있는 분야, 즉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분야와 건설분야 그리고 중공업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일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은 미국 및 러·중의 對日 견제 또는 對日 압력을 위한 代替勢力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통일된 한국보다 분단된 남북한의 상태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59) 통일한국은 북한의 110만과 한국의 60만을 합한 170만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25만 정도의 일본자위대병력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생각한다.⁶⁰⁾

나. 韓半島 統一에 對한 支持 혹은 受用論

그러나 위 논거에 대한 反論에 따르면, 오늘날의 국제적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공산화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며, 따라서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한반도통일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 한반도통일 수용론자들에 따르면, 한반도통일을 우려하는 論者들은 통일한국이 현재 수준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과 통일한국이 군사력을 일본에게 향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반도통일 수용론자들이 우려론자들의 가정을 반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이 통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병력을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막강한 병력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적인 통일한국은 — 물론 지정학적 이유로 통일한국이 금후에도 상당수의 병력을 보유할 필요는 인정되겠지만⁶¹⁾ — 남북한 대결로 초래된 기존의 과도한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0) 이러한 우려는 일본의 평론가 다케무라 켄 이치(竹村健一)의 저서 「日本の悲劇」(東京: 祥傳社, 1991)에 잘 나타나 있다.

61) 인구의 1%정도의 병력의 전통적인 표준비율을 상정할 때 한국은 65만정도의 방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통일한국이 군사력을 일본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이 수용론자들은 통일한국이 러시아연방 및 중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일본을 향하여 군사력을 배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경우 서방측의 일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전선이 400km 北上하는 결과가 되어 일본의 안보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⁶²⁾

經濟的 威脅論에 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통일 수용론자의 주장은 비록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하지만, 통일 후의 수년간은 북한지역 再建에 몰두해야 할 것이므로 일본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의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경제가 일본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낮은 기술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를 따라 잡기에는 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고 평가한다.⁶³⁾

또한 일본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경쟁은 일본경제 및 자유시장체제를 위해서도 건전한 것으로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經濟的

62) Mark T. Fitzpatrick, “코리아統一を日本は何故歓迎すゐか,” 『國防』, vol. 40, no. 9 (1992年 9月), pp. 12~17;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제4집(1990 가을), pp. 146~50.

63) 현재 한국경제의 규모는 일본의 1/14이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포함시켜도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同業者가 되어 세계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⁴⁾

다. 評價

이러한 일본내 한반도통일에 대한 논의 및 한반도통일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개의 분단된 국가를 상대하는 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이 분단된 평화공존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급격한 통일과정 및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南北韓等距離外交를 전개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역사의 불가피한 대세로 될 경우 통일에 반대할 名分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반도통일 상황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서 일본의 안보 및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多角的인 努力을 할 것으로 보인다.⁶⁵⁾

64) 오노 마사아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 『월간조선』, 1992년 1월호, pp. 382~83.

65) 일본은 현재 대북 관계개선 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남북한동거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입장 강화를 통한 남북한 공존체제 유지정책인 동시에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양지역에서 대화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통일 후에도 한국 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다음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자국의 안보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統一問題에 對한 日本의 立場

일본은 한반도통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 政治·軍事問題

첫째,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핵 피폭 경험 때문에 비핵3원칙을 표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고,⁶⁶⁾ 북한의 핵개발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 동북아 안정 및 對美關係를 고려하여 제3세계에서 핵무기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민주적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도 핵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가 非核地帶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일

66) 또한 일본의 대북한 핵무기 보유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반대함으로써 자신이 비핵3원칙을 잘 준수하는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변국가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본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핵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군축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통일이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합의와 주변국 간의 다자간 안보협의를 통해 남북한의 핵 및 생화학 병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총병력을 감축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1992년판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지적하였다.⁶⁷⁾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양국과 미·일·중·러간의 「2+4」회담 등 多者間 安保協議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한반도의 군비통제 등 안보문제에서도 발언권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분단된 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보장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의 전외무차관 하마다다쿠치로(濱田卓二郎)는

67) 防衛廳 編, 「防衛白書」(平成 4年版), p. 74.

1992년 3월 9일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제외에 대응하여 일본과 미·중·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남북한이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한반도문제 토의를 위한 「4+2」 회담을 제의하였는 바,⁶⁸⁾ 이는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은 남북협상 진척 상황과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로서 「2+4」 구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 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노력 등 유엔중시정책을 통해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장차 유엔의 기능이 강화되어 남북한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활동이 실현된다면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한반도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통일 移行期에 북한 김일성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통일한국이 탄생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주둔하여 지역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68) 「朝日新聞」, 1992年 3月 10日.

미군의 한국주둔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가상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逆으로 일본의 역할증대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⁶⁹⁾ 이와 관련, 1992년 11월 8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양국정상은 “클린턴행정부 아래서도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역할이 이 지역 안정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미국의 정책이 새로운 행정부 아래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문제에서의 미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역할 수행을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⁷⁰⁾

나. 經濟·社會的 交流·協力問題

일본은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자국의 대북한 투자확대 등 대북한 경제진출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진전될 경우, 일·북한 수교협상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환영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하부구조 미비로 대북한 경제진출에 소극적인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하부구조 건설 및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대북한 진출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간 교류가 진전될 경우 한국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진

69)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 110.

70) 「朝日新聞」, 1992. 11. 9.

출하기 위하여 일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국의 경제적 진출(수출 및 투자)을 촉진할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남북한교류에 대한 지지입장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남북한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군사문제를 고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第V章 結論: 韓國의 對應

일본은 국제적 탈냉전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남북한 관계진전과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가능성 증대로 對북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면서 한반도에 적극 진출할 것이다. 비록 일본은 한국 및 미국의 압력과 核문제로 인한 자국의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일·북한 협상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미국과 共有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남북한 等距離政策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일본의 남북한등거리정책 추구로 인한 독자적인 대북한 접근을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일·북한 수교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한국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일·북한 수교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시한 5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한·미·일간 정책협의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일·북한수교 이후 한국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의 대응과 관련, 첫째, 수교 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본의 원조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도록 일본에 촉구함과 동시에 대북한 경제원조 수준을 남북한 관계진전과 연계시키도록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한·미·일 협의체제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본의 독자적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및 러시아연방과의 협의채널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일본과의 우호관계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를 지속하면서, 한국은 對日관계보다는 느슨하지만 중·러 두나라와의 對話協調關係 유지를 통해 한반도문제 특히 對북한문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키는 데에 중·러의 도움을 얻고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한 政策構想(일종의 以夷制夷 政策)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19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과 11월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實效性있는 對日 牽制策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일본의 군

사력 강화를 통한 독자적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의 압도적인 경제적 영향력과 독자적인 대북한 경제지원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경제·기술협력의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태지역국가들 및 유럽과의 교역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이니셔티브를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對日 압력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대북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남북한등거리정책을 통한 독자적 영향력증대를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基盤으로 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협력강화가 일본의 독자적 영향력 확대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간 긴밀한 협력은 양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안보이익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 유지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일간의 협력은 일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이고 양국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参 考 文 献

- 菊池正人. “オリブと核: 日朝交渉を見つめるアメリカの眼.”
「現代 コリア」, 第 308 号 (1991 年 1 月).
- 山本剛士. “日朝不正常関係史.” 「世界」, 臨時増刊. 1992 年 4 月.
- 石井修. 「冷戦と美日関係」. 東京: ジャパンタイムズ, 1989.
- 小牧輝夫. “北朝鮮は何のためにどこまで変わる.” 「世界週報」,
1992 年 5 月 19 日.
- 小此木政夫. “朝鮮統一問題と日朝國交渉.” 「國際問題」, 1991 年
3 月.
- . 「日本と北朝鮮」. 東京: PHP 研究所, 1991.
- 岩永健吉. 「戦後日本の政黨と外交」.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 永井陽之助. 「多極世界の構造」. 東京: 中央公論社, 1973.
- 李元炯. “日・韓外交交渉過程の分析.” 慶應義塾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9.
- 日本 防衛廳 編. 「防衛白書」. 平成 4 年版.
- 日本外務省.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第 24 号 (昭和 56 年
版).
- . 「外交青書: わが外交の近況」, 第 35 号 (昭和 3 年
版).
- 佐藤達也. 「朝鮮半島の軍事地圖」. 東京: 社會評論社, 1985.
- 桶渡由美. 「戦後政治と日米關係」.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90.

- 竹村健一. 「日本の悲劇」. 東京: 祥傳社, 1991.
- 佐藤 誠三郎.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제4집 (1990 가을).
- 강태훈. “일본의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집 2호 (1992년 겨울).
- 김국진. 「동북아 안보평화문제에 관한 다자적 협의체 구성문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 김옥렬. 「한국과 미·일관계론」. 서울: 일조각, 1973.
- 김용호. 「북한과 일본의 수교회담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 리석윤. “굴레벗은 군국주의.” 「로동신문」, 1992. 6. 10.
- 민족통일연구원 편. 「소련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오노 마사아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 「월간조선」, 1992년 1월호.
-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 윤우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군사궐력강화책동.” 「로동신문」, 1992. 10. 30.
- 이상구. “한미일 군사제휴관계의 전개과정.” 「국제정치논총」, 제10집, 1970.
- 정규섭. “북한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0.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권 5호
(1990년 5월).

허문영. “북한의 대일·미 교섭 현황과 수교전망.” 「통일연구논
총」, 창간호 (1992년 6월).

황진석. “평화적 이행전략은 제국주의 위기의 산물이다.” 「로동
신문」, 1990. 7. 27.

Bearman, Sidney. “Pouvoir et politique soviétique dans le tiers-
monde: l'Asie orientale.” in Bertram, Christoph, ed. *La Men-
ace soviétique*. Nancy: Biblioth que Berger-Levrault, 1981.

Bridges, Brian.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2, Winter 1991.

Drifte, Reinhard. “Japan's Strategic Environment in East Asia.”
in Chapman, J. W. M., Drifte, R. and Gow, I. T. M. *Japan's
Quest for Comprehensive Secur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Fitzpatrick, Mark T. “코리아統一を日本は何故歓迎するか.” 「國
防」, vol. 40, no. 9 (1992年 9月).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Iriye, Akira. *The Cold War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
sey: Prentice-Hall, 1974.

Kakizawa, Koji.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 Kim, Hong Nack.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90, no. 555, April 1991.
- Koh, Byung Chul. "Is North Korea Changing Its Southward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2, Summer 1991.
- Mabbubani, Kishore. "Japan Adrift." *Foreign Policy*, No. 88, Fall 1992.
- Marshall, Andrew. "Les sources de la puissance soviétique: la puissance militaire dans les années 80." in *La Menace soviétique*.
- Motoi, Tamak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 Winter 1991.
- Sato, Katsumi.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in Okonoki, Masao, ed., *North Korea at Crossroads*. Tokyo: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 Satoh, Yukio.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 Scalapino, Robert A.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 Shinn, Rinn-Sup.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Pas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onsored by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Korea, May 31 June 2, 1992.

Steven, Rob. *Japan's New Imperi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0.

Youn, Jungsuk.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讀賣新聞」.

「朝日新聞」.

「内外通信」.

「朝鮮日報」.

Korea Herald.

研究報告書 (92-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編輯委員會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TEL 266-0892

印刷日 1992년 12월

發行日 1992년 12월
